

보도시점 2026. 7. 1.(수) 조간
2026. 6. 30.(화) 12:00 배포 2026. 6. 30.(화)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17개 시·도 전면 시행 -
- 심리상담부터 법률·학자금 지원까지 한번에... 지난해 유족 2,834명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수)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종전 12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12개 시·도 → (26.7월~)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추가된 전국 17개 시·도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다.(삼성서울병원, '22) 자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는 만큼, 자살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신속히 심리상담과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출처)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정신의학 프런티어스」 발표('22)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장, 경찰서 등 자살 유족이 있는 현장에 출동해 유족을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한번에 제공한다.

* (지원현황) '25년 12개 시·도 대상 2,834명 유족 등록·지원

▲ 사후행정 1,494건 ▲ 법률행정 746건 ▲ 특수청소 299건 ▲ 학자금 74건 ▲ 일시주거 52건

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개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올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신규 5개 시·도(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를 직접 찾아가 지역 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업 설명과 함께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유족과 대화하는 실습,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사업 수행 초기부터 현장 대응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와도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범위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자살유족협회와 협력해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 지원가를 양성(올해 20명 목표)하고 일상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동료 지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올해 160건 목표)하는 등 자살 유족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협약 체결(6.23)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유족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받으신 만큼, 한 분 한 분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빈틈없는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곽도현 (044-202-3893)
협력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고위험군관리부	책임자	부장(직무대리)	이지현 (02-3706-0511)
		담당자	유족지원팀장	이지현 (02-3706-0511)



붙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자살 유족**은 일반적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여 일상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상속 등 다양한 문제 직면***
 - *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 조사결과 법률 상담(71.3%), 주거지원(65.5%), 학비지원(65.4%)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 응답(삼성서울병원, '18)
- **자살 고위험군***인 유족에게 사고 발생 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적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 자살 유족은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22.5배 ↑(삼성서울병원, '22)

□ **추진경과**

- **3개 시도 시범운영('19.9.) → 본사업 전환 및 9개 시도 확대('22.7.) → 12개 시도 확대('25.7.) → 전국 확대('26.7.)**
 - * ('19.9.) 강원 광주, 인천 → ('22.7.) 서울 대구, 충남 충북 세종 제주 → ('25.7.) 경북 경남 대전
 - ** (현재 미시행 지역)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

□ **주요내용**

- **(체계)**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초기대응**(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부터 **심리지원, 환경·경제 지원** 등 전담인력이 **원스톱으로 제공**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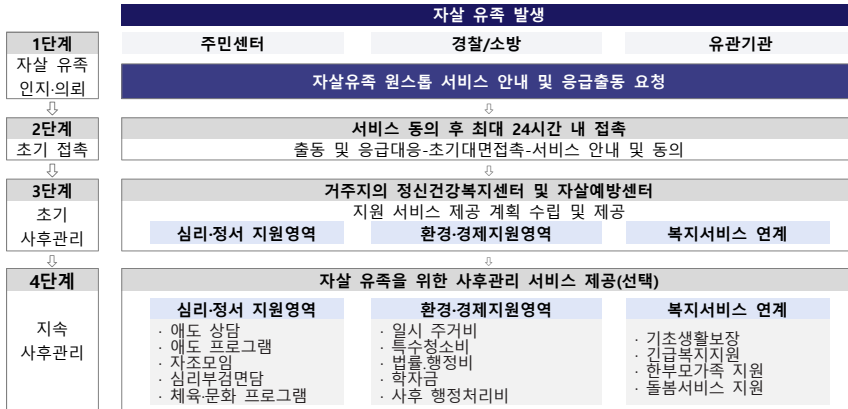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자살사건 발생	3일 이내(권고)	1~3개월
내용	- 자살유족 인지 - 현장출동 요청	- 현장출동 및 초기 대면접촉* - 서비스 안내	- 초기 사후관리 - 서비스(심리정서, 환경경제 지원 등) 제공 계획 수립

* 정보제공을 받은 후 최초 24시간~최대 3일 이내 접촉

- (서비스체계) 지자체의 지리적 요건·자살자 수·인력 등 고려, ①광역-기초 연계, ②광역·거점-기초 연계, ③광역 직접 서비스형으로 구분

* (광역-기초 연계형) 높은 인구밀도, 많은 자살자 수, 높은 지리적 접근성(ex.특별시·광역시), (광역·거점-기초센터 연계형) 낮은 인구밀도, 적은 자살자 수, 낮은 지리적 접근성(ex.도), (광역 직접 서비스형) 높은 인구밀도, 적은 자살자 수, 높은 지리적 접근성(ex.광역시)

< 서비스 전달 체계도 >



- (주요 서비스) 심리지원 및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안착 및 안정화 도모

- (심리·정서) 충격 완화, 애도 상담, 정신건강 평가·상담, 심리부검 면담, 자조 모임, 체육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회참여 및 동료지원 활동 등
- (환경·경제)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학자금, 일시주거 비용, 사후 행정처리 비용, 특수청소 비용 등 지원

< 환경·경제 지원내용 >

서비스	지원내용	지원금액
일시 주거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임시거처 비용 지원	가구당 200만원
특수청소	주거지 내 사망 발생 시 특수청소비용 지원	가구당 80만원
사후 행정처리	시체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비용 등 지원	사망자 1인당 40만원
법률처리	상속, 부채 등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 지원	가구당 100만원
학자금	취약가구의 자녀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자녀 1인당 140만원

- (자원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서비스 이외의 자원 연계 필요시 행정복지센터 연계(긴급복지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